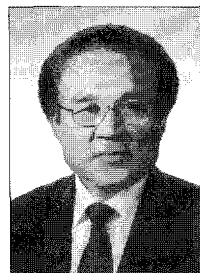


왜 국민농업운동이 필요한가!



윤 천 영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최근 국민농업이란 단어를 학계, 정부 그리고 농민단체 및 농업인들과 소비자들도 당연한 듯이 입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왜 국민농업이 필요하며,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연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농업은 한마디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농업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는 도농상생의 농업,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농업인 것이다.

이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는 1960년부터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0년 제51회 전국대회를 기점으로 국민농업운동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1년부터 우리협회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현재의 심각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

재해문제, 식량안보문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문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돌아보고 왜 지금 농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국민농업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피력하고자 한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주지하다시피, 국제곡물시장의 주요 곡물가격이 요동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위기감으로 각국의 곡물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6월 이후에 50% 넘게 급등한 소맥(밀)을 비롯해, 주요 곡물인 대두, 옥수수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고물가와 실직으로 인한 경기후퇴를 불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이미 세계 식량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계 3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130년 만의 가뭄을 겪으면서 2010년 8월 밀수출을 중단했다. 그 밖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홍수, 남미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작황 부진으로 이어졌다. 밀·설탕 등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콩·깨 등 식용 기름을 짤 수 있는 유지류 가격도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러한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주요 곡물생산 국가들의 기상재해가 주원인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식량 확보를 위해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취한 것과 투기자본이 개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상 변화는 비단 이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상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으며, 그 징후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제곡물수급은 해마다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이에 반해 식량 및 곡물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먼저 미국·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면서 원료 곡물인 옥수수·유지작물·설탕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은 전체 에너지 가운데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바이오에너지 사용 비중을 2010년 5.75%에서 2020년 10%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육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2001년 49.2kg에서 2010년 59.9kg으로 늘어났다. 인도 또한 채식에서 육류로 식량 소비 패턴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1980년 이후 육류 소비가 3.5배가량 증가했다. 육류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곡물소비는 늘어나는 것이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8~11kg의 곡물이 필요하고, 돼지고기는 5~7kg, 닭고기는 4kg의 곡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2월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 사이 식량 물가지수가 29%나 올랐고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사이에는 1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 식량 가격 급등세가 위협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이 식량 가격 안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 문제에 있어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 문제를 범국민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물가 폭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 2월 14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신식량안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OECD 30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2009년 식량 자급률은 51.4%이고, 곡물 자급률은 26.7%이다. 실제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사실상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곡물인 소맥 0.4%, 옥수수 0.9%, 대두 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통계). 이렇게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이 불안할 때마다 이른바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목소리가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곡물을 무기로 하는 자원민족주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며,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은 특정국이나 곡물 메이저 등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 곡물 수입물량 중 72.9%를 카길 등 곡물 메이저 기업과 일본계 종합상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메이저기업의 투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장기 공급계약보다는 필요시 최저가 입찰 방식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인 만큼 가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언제든지 곡물가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를 해외 자원개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처럼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 의존해야 한다. 해외 농업개발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저비용으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방책이 될 것이다. 식량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되고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함으로써 국제곡물 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일정한 면적의 경작 토지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식량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식량안보,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역할과 국민의 기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경제성장에 따른 기대치 및 웰빙생활과 수명의 연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로 농산물을 수입해 먹으면 된다고 비교우위를 주장한다. 하지만, 농업은 안전한 먹을거리와 환경보호, 국토보존,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국가를 지탱해 주는 공익적 기능이 아주 큰 만큼 지키고 유지 발전시켜야 할 산업임이 분명하다.

즉, 가장 기본인 생산기능으로서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의 계승발전, 맑고 깨끗한 휴식 공간, 고향의 따뜻한 정서 등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

분야	평가액 (억원)	비고
◎ 농촌 활력 제고	8,165	
◎ 지역균형발전	16,676	
◎ 환경 및 생태계보전	128,891	
- 지하수함양	41,572	
- 수질정화	21,910	
- 대기정화	55,889	
- 토양유실경감	9,520	
◎ 농촌어메니티 보전	90,141	
- 농촌경과	40,316	
- 정서함양	21,514	
- 전통문화	16,093	
- 휴양 및 여가	12,218	
◎ 재해경감	22,814	
- 홍수예방	22,814	
◎ 식량안보	17,084	
계	284,77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농사를 마치고 논에 물을 가두어 두는 농한기 때나 논농사를 하는 시기에 논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의 양을 우리나라 논 전체의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36억톤 정도가 되며, 이 양은 춘천댐 저수량의 24배에 해당된다. 벼를 기르면서 물을 논에 채워두는 기간을 약 137일로 보고 우리나라 논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논을 통해 땅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은 약 158억톤 정도가 된다. 이 양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년간 사용하는 수도물 양의 2.7배나 되는 양으로 소양강댐 저수량의 8.3배나 되는 엄청난 양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벼와 보리 등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연간 616만5천톤 정도에 이르며, 산소를 공급하는 양은 연간 1,630만톤 정도나 돼 우리

나라 국민 전체가 마시고도 남을 만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이나 저수지의 물은 농촌지역에 들어선 농공단지나 공업단지에서 버리는 물과 생활하수 등이 모인 물로서 이 물속에는 질소, 인산, 황산 등 오염물질이 들어있다. 이러한 물이 눈에 들어와 벼가 이용하는 동안 오염물질은 정화되어 깨끗한 수질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금액으로 환산하였는데, 위 표와 같이 총 28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농업총생산액인 약 20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외에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향의 정취, 포근함 등 이와 같이 농업 및 농촌은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생산외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식품에 대한 기대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수입 농식품의 식탁 지배, 허술한 검역 체계, 수확 후 농약 과다사용으로 오염된 수입 농식품 등 식품 안전성의 위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수입농식품에 대해 국민의 69%가 불신하고 4%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39%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12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안전 인지도 조사'). 식품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안전성'이 56%로 가장 높았다(가격 19%, 맛 13%, 영양 8%, 포장·외관 4% 순). 이렇게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생산자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지식과 요구로 함께 노력하는 농산업 구조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이러한 식량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농업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농업을 통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농업을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도시민, 정부 및 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켜낼 수 있는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농업운동이 더욱 필요하다.

1960~70년대의 상황은 공업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데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농업을 다시금 당당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세계 속에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국민농업운동 대열에 함께 함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



▲ 농촌체험프로그램인 메주 만들기에 열심인 도시민들